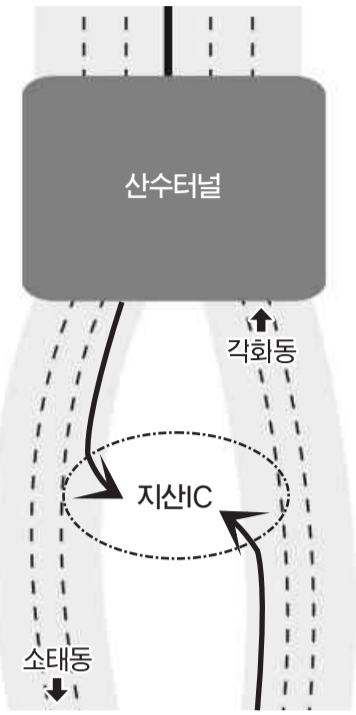


고속주행 1차로에 진·출입로?...대형사고 우려

지산IC 진출입로 개념도



9월 개통 앞둔 제2순환로 지산IC, 기존 교통 흐름과 달라 혼선 당초 3차로 진출입 계획했다가 주민들 소음·분진 민원에 변경 2km 전 속도제한·과속카메라 등 대책에도 급차선 변경 등 위험

오는 9월 개통을 앞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지산IC' 진출입로를 놓고 인근 지역민들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지역 운전자들의 품에 밴 운전 습관과 다른 형태의 도로라는 점에서 충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출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이같은 의견을 수렴, 사고 방지를 위한 6개의 대책을 마련해 내놓았는데 주민들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심 외곽을 순환하는 제2순환도로에서 지산유원지와 무등산 방면으로 나가는 지산IC 개설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사고 우려를 염려하는 주민들 민원이 동구 등으로 접수되고 있다.

광주시 등은 800m 길이의 지산IC 개통으로 국립공원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법원과 검찰 등을 찾

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대만큼 불안감도 적지 않다.

당장,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때 도로 맨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일반적 형태가 아닌, 중앙선 바로 옆 차선으로 진출입 하도록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당초 진출입로는 다른 순환도로 진출입로로 계획돼 지난 2018년 9월 공사가 착공됐지만 일대 주민들의 차량 소음과 분진 등을 이유로 일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바뀌었다.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정이라고 하지만 기존 교통 흐름과 사뭇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순환도로 진출입로의 경우 평소 출·퇴근 시간이면 순환도로까지 길게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는데, 중앙선 바로 옆 차선에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면

교통 정체 때 순환도로에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100km를 넘나드는 고속 차량이 맞닥뜨리면서 급차선 변경을 통한 사고나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선 옆 차로를 추월·고속 차로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진출입하려는 저속 차량들을 피하기 위한 차선 변경으로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같은 형태의 진출입로는 지산IC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최근 이같은 의견을 반영, 경찰·교통관련 기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최근 6개의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놓았다.

6개 방안은 ▲진·출입로 2km 앞부터 도로 바닥에 형광색 차선으로 표시해 안내 ▲단계별 속도제한(90→70→50km) 유도 ▲속도 측정 표지판·과속카메라 설치 ▲진·출입로 전에 위치한 지산터널 내 감속유도시설·터널 조명 개선·전광판 설치 ▲지산IC 진출입로와 연결된 일반도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대시미 홍보 등이다.

특히 광주시는 출퇴근 시간 진출입로 이용 차량들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 신호등(1대당 지체시간 20.4초) 대신, 회전교차로(11.7초)로 설치하기로

존 교통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하면 자동차 1대당 8.7초의 지체 시간을 줄일 수 있게된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지산IC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차량만 하루 중 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일요일 오후 1~2시)을 기준으로 각회동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1시간에 749대, 소태동에서 지산동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은 1시간에 183대로 분석됐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개통을 앞두고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대시미 홍보를 통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기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특별교통안전교육 담당 교수는 "시민들은 개통 초반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면서 "지산 IC 진출입로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9월 말 완공 예정인 지산IC 진출입로 공사의 경우 현재 하부도로 건축물 보강 지원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로, 중단 기간이 길어지는데 따라 개통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이윤만 좇는 ‘죽음의 카르텔’이 원인”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서 지적

성역없는 수사·재발 방지 촉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이윤만을 좇는 '죽음의 카르텔'이 원인이라는 시민 사회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의당 광주시당, 강은미 국회의원, 장연주 광주시의원 등의 주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본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안전사회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번 학동 건물붕괴 참사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이번 참사는 재개발사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짜여진 카르텔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본질적인 원인은 재개발사업의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기 사무처장은 "재개발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기획부동산과 지역 유력자, 조폭과 연루된 부동산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각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안전은 도외시된다"면서 "재개발 현장의 불법적 카르텔 형성이 극에 달한 점이 이번 학동 참사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결성부터 재개발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까지 8~10년 정도가 걸리는데 시공사는 이 기간 매달 2000만~3000만원을 조합에 주며 주민 설득, 인허가 작업을 지원한다"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시공사는 수십억을 들어 수천억 원을 버는 과정에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이권을 챙기고, 기획부동산은 '가구쪼개기'



광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광주만들기시민모임'이 30일 광주학동건물붕괴 사고 현장에서 철거하고도 성역없는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를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과 정비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철거공사 과정에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게 불법 단계 하청을 맡겨 결국 부실 철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창우 안전사회 시민연대 대표는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하청업체에 저비용과 공기단축을 강요하는 최저낙찰가제 대신 적정 낙찰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건설 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시공사, 발주처, 설계·감리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사고현장을 찾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으로 이뤄진 '안전한 광주만들기 시민모임'은 "이번 사고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이면계약, 관리감독 부재, 가구쪼개기, 업체선정 담합 의혹 등 종합적인 비리에 의한 결과였다"면서 "정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정규 학력 게재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A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2019년 6~11월 고교 명예졸업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3만부를 제작한 뒤 3차례에 걸쳐 함평지역 주민들에게 2만4000여부를 우편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비슷한 시기,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

함 4000장도 만든 뒤 함평지역 행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3000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학연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서 "실제 명예졸업장을 받은 점, 함평군수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며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대로 선고하면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에 대한 전남도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씨 징역 4년 확정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화상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에게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 중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주요 범행에 있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개입된 '권력형 범죄'라는 의혹에 선을 그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조씨의 혐의 중 정 교수와 직접 공모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은 대부분 무죄가 확정됐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정 교수 가족의 자금 14억원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블루펀드'에 출자반고도 약정금을 99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는 내용이다.

횡령은 정 교수로부터 총 10억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대가로 코링크PE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이 중 절반인 7000여만원은 유죄가 확정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정 교수와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연합뉴스